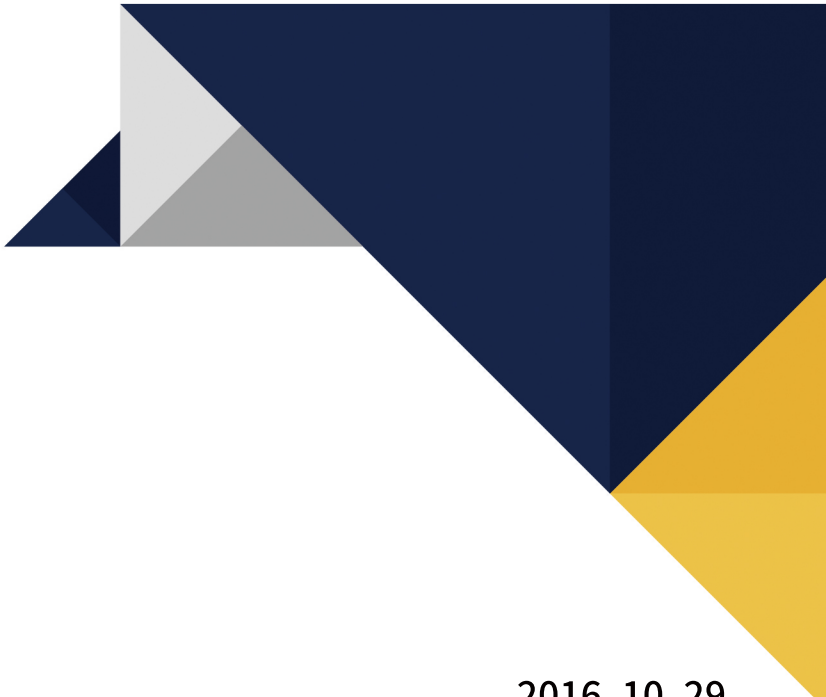


# EVENT REVIEW

일본국가전략연구

**아베 정부 하 일본 방위정책  
변화와 한일안보협력 가능성**



2016. 10. 29

박영준(국방대 안보대학원)

## 1. 전후 일본 안보체제의 근간

### 가. 1945년 패전 이후 일본 안보체제

- :1946년 제정된 일본 헌법,  
메이지 헌법상 규정된 천황의 통수대권(군 통수권) 폐지, 상징적 천황제  
제9조 1항, 일본은 국가정책 수단으로 전쟁 포기  
제9조 2항,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전력 보유 금지  
제66조, 문민통제 조항, 내각 총리대신 및 각 대신은 문민으로 제한
- :냉전체제 전개 이후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일본 독립 회복,  
1951년 동시에 일본 안전보장 확보하기 위해 미일동맹 체결  
일본 영토 내 미군 주둔 허용하여 일본 안보 확보
- :1954년, 육해공 자위대 발족, 방위청 설치, 방위대학교 설치

### 나. 육해공 전력 보유 금지를 정한 헌법과 자위대 존재 간의 법적 모순

- :자위대 창설 이후 냉전기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역할과 무장을 극력 제한하는  
일련의 비군사화 규범 표명
- :헌법상 문민통제 조항에 따라 방위청 및 방위대학교 구성원을 원칙적 민간인  
방위청 대신, 국장급, 사무관 전원 민간 관료로 임명  
방위대학교 교장 및 교수진, 전원 민간인 교수 임용
- :1955년 전수방위(專守방위, exclusive defense)원칙 표명
- :1956년 유엔 가입 이후 회원국에 부여된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나, 행사는 하  
지 않는다는 집단적 자위권 불허 원칙 표명
- :공격용 무기 비보유 원칙-ICBM,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등 보유금지
- :비핵 3원칙(1967년)-핵무기의 제조, 보유, 배치 금지
-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1967년)-군사위성, 정찰위성 보유 금지
- :무기수출금지 원칙-일본 방산업체 생산 무기의 대외 수출 원칙적 금지
- :방위비 GNP 1% 이내 원칙
- :기본적 방위력(basic defense force) 개념-1976년 표명,  
일본 보유 방위력 기준은 자신이 힘의 공백이 되어 주변을 불안하게 할 수 있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방위력에 국한
-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1977년)  
타국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군사력은 보유하지 않겠다는 원칙

## 2. 탈냉전기 보통국가론의 대두와 안보정책 변경

### 가. 90년대 보통국가론의 대두

자민당 간사장 출신 오자와 이치로, 『일본개조계획』(1993) 발간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경제력 지위에 상응하는 국제안보역할 확대  
학계의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정치권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등에 의해 보  
통국가론 정책화 움직임

#### 나. 자위대 안보활동 반경 확대

1992년 PKO 관련 법안 가결

1997년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1999년 주변사태법 등 안보관련 법률 채택

2001년, 미국 대테러 전쟁 이후 자위대 이라크, 인도양 등지에 파견

2003-2004년, 무력공격사태법 등 안보관련 법률 채택

2004년 방위계획대강에서 중국 및 북한 동향을 안보위협요인으로 지적

-> 일본에 대한 주변국으로부터의 무력공격사태나 주변사태에 임해 자위대의  
활동 법적 규정, 미군과의 연합작전시 역할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 포함

#### 다. 종전 비군사화 규범의 일부 수정

2008년, 우주기본법 성립,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 폐기

2010년 방위계획대강, 기반적 방위력 개념 폐기,

동적 방위력(Dynamic Defense Force) 개념 대체

### 3. 아베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 책정과 방위계획대강 개정

#### 가. 국가안보전략서 책정

2012년 12월, 아베 정부 등장

2013년, 국가안보전략 책정을 위한 유식자 간담회 조직

기타오카 신이치, 다나카 아키히코(田中明彦) 등 보통국가론자 브레인 대거  
기용

2013년 12월, 최초의 국가안보전략서 책정<sup>1)</sup>

일본의 국가적 정체성-해양국가, 경제대국, 평화국가

일본의 국가이익 규정-

주권과 독립 유지, 영역 보전, 국민생명과 신체 재산 안전 확보, 평화와  
안전 유지

경제발전을 통한 국민 번영 실현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법의 지배라는 가치에 기반

일본의 대외전략 목표-국제협조주의에 기반한 적극적 평화주의

1)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각의 결정, 「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2013.12.17.)

#### 구체적 안보정책 방향-

일본 자체 역지능력 강화, 미일동맹 강화, 외교와 인적공헌에 의한 글로벌 안보환경 개선,

#### 나. 방위계획대강 개정

2013년 12월, 국가안보전략서 하위문서로서 방위계획대강 개정<sup>2)</sup>

2004년, 자민당 고이즈미 정권 시기의 방위계획대강

2010년, 민주당 간 나오토 정권 시기의 방위계획대강과 주요 논점 비교

<표1: 방위계획대강 2004, 2010, 2013의 주요 논점 비교>

	방위계획대강 2004	방위계획대강 2010	방위계획대강 2013
안보환경 평가	북한 탄도미사일 중국 해공군력 증강	북한 WMD와 탄도미사일 개발 중국 군사력 증강, 원거리 투사능력 강화	북한 핵 및 미사일 개발 중국 국방비 증가, 군사력 강화
일본 자신의 능력	다기능탄력적 방위력+기반 적 방위력 중앙즉응집단	동적 방위력	통합기동방위력 육상자위대 통일사령부 수륙양용작전능력 강화
미일동맹	미일동맹 강화	미일동맹 강화	미일동맹 강화
지역 안보 협력	국제사회와의 협력 아태지역 다자간 협력	아태지역 양자간 다자간 협력 강화 한국, 호주, 아세안 국가	한국, 호주 양자협력

## 4. 집단적 자위권 용인 결정과 일련의 변화

### 가. 집단적 자위권 용인 결정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 헌장에 의해 회원국에 의해 부여된 권한

회원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능

:아베 수상은 종전에 행사가 금지시된 집단적 자위권 허용하는 것이 보다 대등한 미일동맹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sup>3)</sup>

기타오카 신이치 등 유식자 간담회 조직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논리 작성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 용인 결정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사태, 중요영향사태, 존립위기사태 등에 집단적 자위권 적용 가능

주변 지역 뿐 아니라 글로벌 범위에서 일본에 대한 위협 가해질 경우로 적용범위 확대

2)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각의 결정, 「平成26年度以後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2013.12.17.).

3) 安倍晋三, 「新しい国へ」『文芸春秋』2013년 1월호.

나. 미일동맹 차원의 가이드라인 개정, 일본 국내 11개 안보관련 법제 제, 개정

:2015년 4월,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반영하여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직접무력공격사태, 중요영향사태, 존립위기사태 등 미일간 안보협력 확대

:2015년 7-9월, 일본 국내법제에 집단적 자위권 적용, 안보법제 제정 및 개정

<표2: 11개 안보법제의 주요 개요>

안보법제 명칭	경위	개요
중요영향사태안전확보법	1999 주변사태법 개정	기존 주변사태개념을 중요영향사태로 개정
무력공격 및 존립위기사태 대처법	2003년 제정된 무력공격사태법 개정	기존 무력공격사태에 더해 존립위기사태 개념 포함
자위대법 개정안	기존 자위대법 개정	기존 자위대법에 존립위기사태 개념 포함
국제평화협력법 개정안	1992년 PKO법 개정	PKO 활동시 자위대 휴대 장비 등대 포함
선박검사활동법 개정안	2000년 제정	중요영향사태 등에 침해 선박검사활동 관련 조항 개정
미군행동관련 조치법 개정안	2004년 제정	무력공격사태 및 존립위기사태시 미군 지원에 대한 규정
특정공공시설이용법 개정안		무력공격사태시 미군 이외 외국군대 행동을 이용, 조정
해상수송규제법 개정안	2004년 제정	무력공격사태 및 존립위기사태에 있어 외국군용품 등 해상수송 규제 관련 법률
포로취급법 개정안	2004년 제정	무력공격사태 및 존립위기사태에 있어 포로취급 규정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		중요영향사태, 존립위기사태 반영
국제평화지원법 제정		국제평화, 공동대처에 있어 외국군대에 대한 협력지원활동 규정

## 5. 향후 아베 정부 안보정책 방향: 헌법 개정 전망

가. 아베 정부 잔여 임기와 헌법 개정 예상

:현행 자민당 규정에 의하면 2018년까지 자민당 총재 가능

자민당 규정 개정될 경우 2012년까지 자민당 총재 및 수상 임기 가능

:잔여 임기 동안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 추진에 역점을 둘 것

2013년 1월, 논문에서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시 현행 9조 1항, 즉 국가정책수단

으로 전쟁 포기한다는 조항은 유지하고, 제2항을 변경하여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명기해야 한다는 점을 밝힘<sup>4)</sup>

:2012년 자민당 내에서 작성한 헌법 개정 시안도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음

나. 제9조 2항 개정을 통해 “국방군” 조항 포함시 일본 안보정책 전망

:기존 헌법상 법적 성격이 부여되지 못했던 자위대, 헌법적 기구로서 성격 보유

:자위대 운용 관련 보다 투명성이 요구될 수 있음

:제9조 1항이 유지될 경우 기존의 전수방위원칙, 비핵3원칙, 공격용 무기 비보유 원칙 등 비군사화 규범 다수는 크게 변경되지 않을 것

## 6. 아베 정부 방위정책 변화에 대한 한국 대응방향

4) 安倍晋三, 「新しい国へ」『文芸春秋』2013년 1월호.